투자금 70% 날리고…끝내 날아간 내집 마련 꿈

지산주택조합 분양사기 피해 92명 피해액 32% 보상 받고 합의
억울함 하소연할 데도 없어…남은 피해자들은 소송·합의 진행
조합측 시공사 변경에 따라 행정상 절차 완료되면 착공하기로

'이사할 집을 찾으러 부동산 사무소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넓지 않지만 그리 좁지 않은 내 집을 갖게 된다. 게다가 남들보다 싼 가격에 사서 프리미엄을 얹어 팔 수도 있다.'

이런 꿈을 꾸며 어렵게 모아둔 수천만원을 투자했던 120여명의 '내집 꿈'이 박살났다. 프리미엄을 얹어 팔게되면 수억원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은커녕, 투자한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됐다. 자격도 없는데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던 '고마운' 재건축 주택조합 관계자는 돈만 받아챙긴 '나쁜 놈'으로 바뀌었다.

23일 지산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자 90여명은 조합측으로부터 계약금과 분담금의 32%를 피해보상금으로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체 분양사기 피해자 125명 중 92명이 이같은 조건에 합의하면서 15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조합측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중이다.

소중히 모은 돈을 계약금으로 내며 수 십년 만에 내 집을 갖게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던 이들은 집은커녕, 투자금의 70%를 날려버렸다. 1인당 2000~9000만원의 계약금과 분담금 등을 냈던 주민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 번듯한 집은커녕, 고작 750만원~3000만원만 돌려받게 된 셈이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분담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탓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다. 집 값이 오르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담금보다 프리미엄비를 더 얹어 지불하기도 했다.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 일반 분양가보다 수 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싸게 내 집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고맙기만 했던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은 피눈물나게한 '원수'로 돌변했다.

이들 대행사 직원들은 1세대당 3~4명에게 중복 분양하는 방식으로 모두 125명에게 81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주민들 피해는 현실화됐고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범행을 주도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태껏 이뤄지지 못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 뿐 아니라 이중 분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지역주택조합장 등 22명에 대한 재판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산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었지만 가장 빨리 정상화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원하면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조건과 계약서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주택조합은 한양건설에서 한국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원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등의 행정상 절차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FC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 검찰, 기영옥 전 단장 불기소

검찰이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을 역임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구단 예산 3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광주FC에 대한 특정 감사 과정에서 기 전 단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기 전 단장이 감사 전 원금을 상환했고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횡령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 선수의 아버지인 기 전 단장은 대한축구협회 이사, 광주시축구협회장, 광주FC 단장을 지냈다.

현재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안전교육 제대로 안해 사고…회사 손배 책임"

법원 "1억2000여만원 지급하라"

작업 중 소속 직원의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주의했던 회사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A씨에게 위자료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프레스 작업 도중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후 2억2000만원 규모의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당시 손목이 다친 탓에 양손을 사용해 프레스 설비를 조작하던 방식을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형태로 변경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페달 방식으로 바꾸게되면 손이나 다른 물건이 감지될 경우 작동을 멈추는 센서를 끄고 작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페달방식은 양 손으로 프레스기 작동 버튼을 누르는 대신, 물건을 잡아야 하는 등 큰 제품을 제조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사용한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입사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A씨에 대한 교육·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페달방식으로 작업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회사가 작업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통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회사측은 임의로 작동방법을 바꿔 사용하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A씨의 전적인 과실로, 기기 결함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에게 평소 안전교육을 시켰고 정해진 작업방법을 엄수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페달작업을 하도록 배당받지 않는 한 양손을 쓰는 형태로 작업해야 하는 점, 작업 방식을 바꿀 경우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맡아야 하는 점 등을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 회사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위해 140억여원의 사업비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복원 사업은 당초 완료 예정 시기인 2022년보다 2년 가량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옛 전남도청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밥 사며 총선 지지 호소…후원회장 벌금형

광주지법, 벌금 80만원 선고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밥을 사며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선거캠프 후원회장으로,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께 광주의 한 횟집에서 지인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향자 후보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광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OOO께서 양향자 후보를 적극 지지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시기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래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대체로 해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던 점, A씨의 행위가 의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애초보다 2년 늦어질 듯

공사비 143억 늘어 사업비 늘리기
기재부에 증액 요구…타당성 재조사
2024년 말 돼야 복원 마무리 전망

내년 예정됐던 5·18 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애초보다 2년 늦어질 전망이다. 원형 복원에 필요한 공사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복원사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옛 전남도청복원 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 등에 따르면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총사업비 를 늘리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복원추진단은 지난해 9월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애초 예상(254억7600만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143억 6500만원 상당의 사업비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기재부는 20% 이상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겼다.

추진단은 확 트인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거했던 경찰국 건물 내 층간 구조물을 복원하는데 120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계획은 5·18 관련 단체 등이 1980년 당시 경찰국 건물의 원형 보존을 요구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 때문에 복원설계 용역 등도 일시 중단된 상태로, 추진단은 당초 설계용역이 끝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공사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해 복원공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2년 늦춰진 2024년 말에야 복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원추진단은 오는 3월 15일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 내 구축된 전시품(구동장비, 전시소품, 관객 서비스 집기 등 포함) 및 기타 복원 건물 내 물품의 철거·해체·이전·보관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경찰국본관·도청회의실·경찰국 민원실·상무관 등에 있는 '열흘간의 나비떼' 등도 국립아시아 문화창조원 지하 4층으로 옮겨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12200	1	북구 문산로20, 103동 13층 1304호 [문흥동,문흥상록아파트] 59.802㎡	아파트	123,000,000 123,000,000	
2020타경 13234	1	북구 문산로99, 102동 15층 1501호 115.880㎡	아파트	266,000,000 266,000,000	
2020타경 13524	1	광산구 목련로382번길114-1, 101동 12층 1201호 [신창동,중흥아파트] 59.940㎡	아파트	126,000,000 126,000,000	
2020타경 13739	1	나주시 한빛로61, 109동 10층 1002호 [빛가람동,빛가람우미린] 76.1881㎡	아파트	215,000,000 215,000,000	
2020타경 73823	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17-6, 4층 406호 [쌍암동,에이엠시티4차] 32.3203㎡	아파트	87,000,000 87,000,000	
	2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17-6, 4층 407호 [쌍암동,에이엠시티4차] 32.3203㎡	아파트	87,000,000 87,000,000	
2020타경 74406	1	광산구 수등로258번길13, 103동 5층 504호 [신가동,신가지구도시공사아파트] 59.81㎡	아파트	167,000,000 167,000,000	
2020타경 74550	1	북구 서하로233번길60, 101동 6층 603호 84.94㎡	아파트	159,000,000 159,000,000	2020년10월부터관리비미납상태
2020타경 75577	1	서구 마재로21, 107동 1층 109호 [금호동,중흥아파트] 59.46㎡	아파트	172,000,000 172,000,000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10655	1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산19-2 19835㎡[공유자김복순지분1/2전부.소유자미상분묘수기소재]	임야	37,686,500 37,686,5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0타경 12446	1	광산구 흑석동 산59 2256㎡	임야	6,091,200,000 6,091,200,000	공부상지목임야이나현황업나지임
2020타경 12637	1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96 2969㎡[농지자격취득증명요]	전	9,500,800 9,500,800	경계지상의일부가도랑으로이용중
2020타경 74666	1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산64 676㎡[한동식지분6/13전부[갑구2번,4번,7번].매각대상에식재된수목[대나무등]은매각지분비율에해당하는수목매각포함]	임야	8,424,000 8,424,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분묘소재여부미상
[자동차,중기]					
2020타경 10235	1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37 지하1층[진월동335-11] 등록번호:83조6974 차명:봉고Ⅲ 1톤 연식:2019[검사유효기간경과.차량외관에찌그러짐등있고운전석범퍼등깨진상태]	자동차	16,000,000 16,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제3자보관중
	2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37 지하1층[진월동] 등록번호:81버5477 차명:봉고Ⅲ 1톤 연식:2019[검사유효기간경과.차량외관에찌그러짐등이있음]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제3자보관중
2020타경 75409	1	사용본거지: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동 월봉 7길 33-6, 102호 등록번호:27우2109 차명:QM6 연식:2019	자동차	24,000,000 24,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20타경 76372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수완로10번길7, 302호[수완동] 등록번호:37라7573 차명:제네시스 연식:2012	자동차	9,500,000 9,500,000	보관:광주광산구우산천변길67-17서창다리주차장
[기타]					
2018타경 71534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9-5 2037㎡	공장용지	6,890,983,100 6,890,983,1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절단기외28점[일괄매각대상인기계,기구중분쇄기[기계기구목록1기호2],수변전설비[기계기구목록1기호8]는소재불명,수질오염방지시설은폐쇄,해체됨]]매각포함.제시외기계기구8점매각포함
		동소 609-6 3266㎡	공장용지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452-12 [주건축물제1동] 1~3층각40㎡ 4층63.375㎡ 제시외 주방 등 19.6㎡	공장		
		동소 452-14 [주건축물제2동] 지하1층207.25㎡ 1층3229.27㎡ 2층26.2㎡ 제시외 창고 등 141.2㎡[부동산의건축물대장의도로명주소는452-12]	공장		
		소재지:장성군 황룡면 강변로[월평리,452-14]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 기계기구목록 제2013-67호,제2013-68호,제2013-69호,제2013-70호,제2018-150호,제2018-151호] 제시외 기계기구목록참조[물건번호1: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별지기재와같음]	기계기구		
2020타경 73908	1	광산구 본덕동 169 876㎡[공유자반재희지분2/11전부.현황토지임야임]	묘지	5,892,990 5,892,99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0타경 74666	2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20 169㎡[한동식지분6/13전부[갑구2번,4번,7번].매각대상토지에수목[측백나무]이소재하나분묘에귀속되어매각제외]	묘지	6,084,000 6,084,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연고미상분묘2기소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3. 10.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3. 17.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두현